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여론 확산”

양돈협 등 축산·농민단체, 학계 등 전 농업계 폐지반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폐지 대상 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존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분야의 연구기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 사실상 민영화하고 감축대상 공무원 6,951명 중 농림수산분야 연구인력이 3,086명이나 되는 것은 사실상 농림수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6일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21일까지 농진청의 폐지를 반대하는 양돈협회를 비롯한 전국의 농업관련 단체와 학계의 성명서가 무려 42개에 달하고 있다.

■ 농업계 “농업죽이기” 맹비난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1월 16일 현행 2원, 18부, 4처, 10위원회, 4실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2원, 13부, 2처, 5위원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는 “농촌진흥청의 폐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은 농업과 농촌, 350만 농민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개방화에 따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조직체계를 지닌 농진청을 존속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과 농촌의 버팀목이자 시장개방시대에 국제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연구와 기술보급 기능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일선 지도조직과의 연계 약화로 연구성과의 효율적 보급이 이뤄질 수 없다”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임에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농촌진흥청 폐지안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50만 농민은 새 정부의 농정추진 참여 전면거부, 폐지안을 승인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거부와 낙선운동 전개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 전 농업계로 비난 여론 확산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축산단체협의회 등 농민, 축산단체들과 국공립농과대학장, 관련학회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 농업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농업인도 농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rda.go.kr) 게시판을 통해 농진청 존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폐지방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 전국 350만 농민이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연구와 기술보급 기능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떠넘길 경우 일선 농촌 지도조직과의 연계가 약화되어 연구성과의 효율적 보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둘째, 10년 전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로 인해 체계적인 농업기술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농민들은 이를 바로잡고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법제화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셋째, 농업기술연구를 국가조직인 아닌 출연연구기관이 맡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기초영농 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없을 것이며, 경제논리에 따라 소수 특정분야에 연구가 치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넷째,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하는 농촌진흥청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 농업기술 연구와 지도사업의 최대 수요자인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을 섬기는 자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전국 350만 농민이 ‘농촌진흥청 존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 100년 넘는 기간에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이끌며 농축산업의 선구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농민들을 봉사하고 희생으로 대해온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정부조직으로 남아야 합니다.

둘째,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은 ‘필수조직’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기술농업이 개방파고를 극복할 대안이라는 것은 정부나 농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을 더 강화해 기술농업을 선도해야 합니다.

셋째,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자율성 조장이 중요합니다. 농수산식품부의 정책수행에도 원천기술·실용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농촌진흥청이 필요합니다.

넷째, 농업관련 국가조직을 최대한 가동해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우리 농민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입니다. 새 정부는 농업기술 연구와 기술보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진입의 토대가 될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촌진흥청을 살려야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식품행정 농림부 일원화 돼야”

양돈협회 등 농축산단체 성명… ‘농장서 식탁까지’ 일관 관리체계 중요 강조

1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식품안전업무는 현재 8개 부처, 26개 법률로 분산 관리되어 있으며, 현재 축산물의 경우 농림부가 생산부터 유통단계(수입, 도축, 가공, 판매포함)까지, 식약청이 소비단계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책의 책임성, 효율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가 제기 계속되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었다.

2 농림부로 식품안전관리가 일원화해야 하는 이유

식품안전은 생산, 사육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항생제 등 대부분의 위해물질이 사용되므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서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식약청으로 일원화될 경우 농가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생산단계는 농림부에 위탁해야 하므로 사실상 이원화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국제적인 추세를 살펴보더라도,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생산부처로 식품안전행정 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05년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후생성 및 농수성에서 정책을 각각 집행하고 있다.

지난 '98년 축산물 안전관리가 농림부로 이관되어 안전관리가 향상된 만큼 소비자 만족을 위한 생산부처의 안전관리 능력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장,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 판매업소 등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역추적과 원인규명이 가능하게 되어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농진청, 농관원, 수과원 등 농약, 동물약품, 인수공통전염병 및 안전제도 관리를 위한 조직과 약 1천5백여명이 전문 인력을 보유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자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식품안전관리업무의 농림부로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산업계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농식품 육성을 위한 농림부로의 식품행정체계 일원화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양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를 비롯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윤요

근, 농민연합(상임대표 정재돈) 등은 지난 1월 9일 식품업무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식품행정 절실

이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농업식품부'의 확대 개편안은 농업의 가치를 식품산업까지 한 단계 높은 획기적인 변화로 팔목할 만한 정책임을 평가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행정관리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식품산업이 농업에 포함되는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만큼

공급자인 농민들에게는 부가가치 창출로 소득원이 커지게 되고, 소비자에게는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최종단계까지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식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도 생산부처로 식품안전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독일의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캐나다의 농업식품부, 스웨덴의 농업식품소비자부를 예로 들며, 행정체계가 일원화되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역추적과 원인규명이 가능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양도**

<표 1>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

구 분	1차 생산(품)		2차 생산(품)		유통 (보관/운반 등)	소 비 (식당, 백화점등 최종판매단계)
	재배/사육등	수 입	국내가공	수 입		
독 일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 지방정부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맡음					
캐 나 다	농업식품부 * 보건부 : 식품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유통·소비단계 : 통상 주정부 담당)					
스 웨 덴	농업식품소비자부 * 주요업체(약 600개소)는 농업부에서, 기타업체는 지방정부에서 관리					
일 본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 식품안전위원회 : 식품안전성 평가 담당				
미 국	농업부	보건부(식약청) : 일반식품 농업부(USDA) : 축산식품				지방정부
	* 먹는 물, 주류 등은 환경부, 재무부 등에서 담당(유통소비단계 : 통상 주정부 담당)					
한 국	농림부	복지부(식약청) : 일반식품 농림부 : 축산식품				복지부(식약청)
	* 먹는 물, 주류 등은 환경부, 국제청 등에서 담당					

*식품안전업무가 8개 부처, 26개 법률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사각지대, 중복 발생으로 책임관리가 미흡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 상존
 *식품안전일원화를 통한 책임관리, 효율성 증대로 사전 식품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대두